



유로본드 발행 합의 불발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11월 23일 독일의 국채 발행이 수요 부족으로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11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입장을 바꿔 유로본드 발행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.

- 독일 정부는 11월 23일 60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, 입찰 수요가 부진해 36억 4,000만 유로만 발행함.
- 독일의 국채 입찰 실패가 유로 위기로 인식되면서 유로/달러 환율은 1.33달러대로 추락함.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 부진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신호로 간주함.
- 독일 언론 빌트는 11월 24일 독일의 집권연정이 유로본드 발행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함.
 - EU 회원국들이 '안정 및 성장 협약(Stability and Growth Pact)'을 강화하는데 합의한다면, 독일 정부가 그에 상응해 유로본드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독일은 그간 '안정 및 성장 협약'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60%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었음.

■ 유로본드란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로본드 발행 시안은 크게 세 가지임.

- 첫 번째 시안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것임.
 - 유로존 국가들이 신용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 정부가 다른 모든 정부의 국채를 보증하게 됨.
- 두 번째 시안은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중 일부만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방안임.
 - GDP의 60% 또는 각국 정부의 규정준수 여하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하여 채권 발행함.

- 상한선을 넘어 발행된 국채는 연대보증에서 제외함.
- 세 번째 시안은 유로본드로 개별 국채 일부를 대체하되, 유로본드는 연대보증이 아니라 각국이 특정 수준까지만 보증하는 방안임.
- 전문가들은 EU조약 개정이 필요 없는 세 번째 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, 채권은 신용도가 높은 '블루본드'와 신용도가 낮은 '레드본드'로 나뉘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.
 - 블루본드는 최대 6조 유로까지 발행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7조 2,500억 유로 규모인 미국 국채 시장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임.
 - 블루본드는 독일 국채보다 낮은 금리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비용이 10%까지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
■ 그러나 11월 24일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정상들은 독일의 반대 입장 고수로 유로본드 발행 합의에 실패함.

- 독일은 유로본드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, 재정위기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.
-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독일의 국채금리가 다른 재정위기 국가와 비슷해질 수 있으며, 이는 결국 독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임.
- 이번 정상회담에서 3개국이 유로존 재정통합에 대해 논의기로 합의한 것은 재정위기 해결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, 시장은 재정통합보다는 유로본드 발행 무산에 민감하게 반응
 - 유럽증시는 6일째 약세를 보임.

(Wall Street Journal 11/24, 11/23, 11/22)